

KERI Brief

한·일 무역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lcho@keri.org)

글

로벌화와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생산방식이 바뀌면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과거의 관세전쟁과 다른 새로운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일 무역분쟁도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화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여 상대국의 공급망을 붕괴시키려는 분쟁으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무역분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관세전쟁은 국내 기업이 대응할 여지가 존재하여 0.15%~0.22%의 GDP 손실에 그칠 것으로 평가되지만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키므로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의 30% 부족이 발생하기만 해도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로 영향의 차이가 크다. 이에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3.1%, 1.8%로 손실이 확대된

다. 무역분쟁으로 양국이 손해를 보는 반면 제3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과거의 분쟁과 유사하다. 한·일 무역분쟁이 확대될 경우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하여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이다. 수출규제가 자동차, 철강 등으로 확대되거나, 금융규제 및 비관세 장벽까지 동원된다면 양국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한·일 양국의 협력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할 국가로 발전하는데 있어 한·일 무역 분쟁은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가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개별기업 및 경제단체의 민간 외교력까지 총동원하여 한·일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I. 문제제기

□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함으로써 한·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일본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 소재인 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선언함으로써 생산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가 간 무역분쟁이 있어왔지만 대부분 자국 내 산업 보호와 교역조건 개선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관세전쟁이 대부분이었음

-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¹⁾, 미국-프랑스와 독일 간에 치킨 관세전쟁(1960s), 미국-일본 간의 자동차-전자 관세전쟁(1987), 미국-유럽 간의 바나나 전쟁(1993), 미국-유럽 간의 철강 관세전쟁(2002) 등이, 캐나다-미국 간의 목재관세 전쟁(2018)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힘
- 과거의 대부분의 무역전쟁은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가 촉발했다는 점과 의도되는 달리 보호하려는 자국 산업의 피해와 제3국에게 반사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²⁾
-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관세전쟁은 양국 모두 피해를 보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 빠지기 때문에 GATT/WTO의 상호호혜주의와 같은 간단한 협상으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1987년 미·일 무역전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본은 의류, 컬러TV, 반도체, 자동차 등의 자발적 수출계약(voluntary export restriction)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음³⁾

□ 한·일 무역분쟁은 무역흑자국인 일본이 촉발했다는 점과 상대국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붕괴시키려는 분쟁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글로벌화와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생산방식이 바뀌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을 공격해서 이득을 보려는 새로운 방식의 무역전쟁이 발생하고 있음
- 4차 산업분야에서 노동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면서 모든 부품을 단일 생산 시설 내에서 생산하는 분야가 사라지면서 자국 내 산업보호라는 의미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
- 따라서 자국 산업보호보다는 경쟁기업의 가치사슬을 공격하여 4차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무역수지 적자에 상관없이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가 무역분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1) 미국은 2만여 개의 수입품에 평균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보복관세를 불러왔음
- 2)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산 수입 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응하여 미국이 이들 국가의 경트럭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으로 경트럭을 수출하던 도요타, 이슈쿠 등 일본 자동차 회사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자동차, 반도체, TV 등 300백만 달러에 달하는 일본 수입제품의 가격을 2배 올리면서 발생한 1987년의 미·일간 관세전쟁으로 한국의 반도체와 전자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 3) 일본은 의류, 철강, 컬러TV, 자동차, 반도체 등에 자발적으로 대미 수출을 줄이는 조치를 통해 1987년의 관세전쟁을 완화하였음

-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를 넘어 중국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하고 4차 산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분쟁으로 이해되고 있음⁴⁾
- 한일 무역분쟁도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화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여 상대국의 공급망을 붕괴시키려는 분쟁으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무역분쟁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상대국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붕괴시키려는 분쟁으로 규정하고 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다지역·다부문 글로벌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일본의 수출 수량규제와 이에 따른 생산차질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특히 이번 한·일 무역분쟁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규제대상 산업을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간주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생산거점 재조정이 가능한 모형을 구축함⁵⁾
- Dixit and Stiglitz(1977), Krugman(1980), Melitz(2003)가 제시한 바와 같이 독점적 경쟁시장 하에서 무역의 증감이 규모의 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기업의 진퇴입이 결정되는 모형을 구축하였음

○ 따라서 본 모형은 수출입 가격변화에 따른 교역조건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독점적 이윤 변화에 따른 내수산업 또는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생산거점의 재조정 효과를 함께 반영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님

4) 미 백악관에서 발간한 최근 보고서는 중국 정부 주도의 기술 탈취로 세계 경제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미국은 중국의 시장 왜곡적이며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중국 특유의 국가자본주의체제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면서 '중국제조 2025'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음. 미·중 무역전쟁이 무역불균형 해소를 넘어 '시장경제 블록' 대 '국가자본주의'의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경제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러한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5) 조경엽(2018) 참조

II. 한·일 무역현황

1. 한·일 경제력 비교

□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강한 펀더멘털과 규모의 경제를 자랑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우리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제2의 경제대국에서 3위로 떨어지고 일인당 GDP격차가 우리와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경제규모와 기술수준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인구는 일본이 약 1억 3천만 명으로 우리보다 2.5배 많고, GDP규모는 4조 8천억 달러로 우리보다 3.2배나 크고, 일인당 GDP는 3만 8천 달러로 1.3배나 많음
- 외환보유고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조 2천 5백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보다 3.1배 많은

상황이며,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산업)은 51(20)개로 우리보다 3.4(2.2)배나 많음

- 우리나라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이 2017년 기준으로 77개에 달해 1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은 171개로 5위를 차지하고 있음

2. 한·일 수출입 현황

1) 한·일 총수출입 현황

□ 한국의 2018년도 수출은 세계 6위, 수입은 9위, 교역규모는 9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수출은 6천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액의 3.1%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5천 4백억 달러로 2.8%를 차지하고 있음
- OECD가 발표하는 2017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0.8%(수출 43.1%, 수입 68.8%)로 OECD 평균 58.4%(수출 29.4%, 수입 29.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표 1> 한·일 비교

	한국 (a)	일본 (b)	비교 (b/a)	비교 연도
인구 규모(천명)	51,454	126,746	2.5	2017
명목GDP(10억 달러)	1,530.8	4,860.0	3.2	2017
일인당 GDP(달러)	29,750	38,345	1.3	2017
외환보유고(억 달러)	4,037	12,583	3.1	2018.12
포춘 500대 기업(산업)(개)	15(9)	51(20)	3.4(2.2)	2017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개)	77개(12위)	171개(5위)	2.2	2017

자료: 전경련, IMF data, OECD Stat,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표 2> 한국 2018년도 수출입 규모

구분	세계의 수출입액 (백만 달러)	한국의 수출입액 (백만 달러)	비중(%)	순위
수출액	19,522,259	601,154	3.1	6위
수입액	19,587,304	543,186	2.8	9위
교역액	39,109,563	1,144,340	2.9	9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일본은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수출입 규모가 세계 4위에 위치하고 있음

- 일본의 수출은 7천 3백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액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은 7천 5백억 달러로 전 세계 수입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도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34.6%(수출 17.8%, 수입 16.8%)로 한국의 절반수준임

2) 한·일 주요 교역 대상국

- 대중국 수출과 수입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일본 수출과 수입은 각각 5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대일본 수출은 305억 달러에 달하고 수입은 546억 달러에 달해 무역규모는 85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대일본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5%에 달하고, 수입은 10.2%에 달해 총 교역의 15.2%가 일본과 이루어지고 있음

<표 3> 일본의 2018년도 무역규모

구분	세계 수출입액 (백만 달러)	일본 수출액 (백만 달러)	비중 (%)	순위
수출	19,522,259.0	732,629.0	3.75	4위
수입	19,587,304.0	748,849.0	3.82	4위
무역	39,109,563.0	1,481,477.0	3.79	4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4> 2018년도 한국의 5대 수출입국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백만 달러)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백만 달러)	비중
1위	중국	162,125	26.8	1위	중국	106,489	19.9
2위	미국	72,720	12.0	2위	미국	58,868	11.0
3위	베트남	48,622	8.0	3위	일본	54,604	10.2
4위	홍콩	45,996	7.6	4위	사우디아라비아	26,336	4.9
5위	일본	30,529	5.0	5위	독일	20,854	3.9

자료: 한국무역협회

□ 일본도 최대 교역 국가는 중국이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국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수출에서 대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달하고, 수입은 4.3%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교역의 11.4%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음
- 한국은 대일본 교역에서 수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본은 대한국 교역에서 수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규모 측면에서 관세전쟁은 한국보다는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3) 한·일간 수출입 현황

□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대부분이 소비재가 아닌 산업재이기 때문에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일본산 수입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반도체 소재이며, 다음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부품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핵심기술과 부품·소재 등의 공급단절은 첨단 산업의 밸류체인 붕괴로 이어져 국내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반도체 공정의 핵심물질인 불화수소 수입의 9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일본으로부터 수입 차질이 생길 경우 반도체 생산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음
- 차량용 반도체도 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 수입이 중단되면 자동차 하청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고 관련 종사자 170만 명의 고용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높음
- 나아가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할 전망
-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은 일본에 32.9%, 미국에 25.7%, 네덜란드에 25.9%를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선을 돌릴 경우 물류비용이 늘어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전망

○ 중국이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공급하면서 우리의 반도체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장비의 핵심 부품마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

○ 이 밖에도 철강, 정밀화학원료, 자동차 부품 등 핵심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표 5> 2018년 일본의 5대 수출입국

(단위: 백만 엔)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백만 엔)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백만 엔)	비중
1위	중국	15,901,033	19.5	1위	중국	19,187,145	23.2
2위	미국	15,465,772	19.0	2위	미국	9,011,130	10.9
3위	한국	5,793,127	7.1	3위	오스트레일리아	5,048,482	6.1
4위	대만	4,679,553	5.7	4위	사우디아라비아	3,732,746	4.5
5위	홍콩	3,832,861	4.7	5위	한국	3,548,886	4.3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6> 한국의 대일본 수입 현황

순위	품목	금액(천 불)	대일본 수입비중 (%)	일본의 대한국 수출비중 (%)	일본 이외의 주요 수입국 1~3위 국가
1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848620)	3,842,184	32.0	34.0	네덜란드(31.6), 미국(24.9), 싱가포르(9.8)
2	프로세서와 컨트롤러(854231)	1,921,532	11.7	5.6	대만(41.2), 미국(18.5), 중국(11.7)
3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720449)	1,468,626	65.6	39.3	러시아(15), 미국(13.6), 영국(1.8)
4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854140)	975,764	36.0	3.5	중국(37.1),대만(13.2), 말레이시아(4.5)
5	크실올(270730)	971,534	97.3	66.5	대만(1.1), 미국(0.7), 필리핀(0.5)
6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dope)처리된 화학원소/화합물(381800)	889,164	34.6	20.5	중국(36.4), 싱가포르(11.3), 미국(5.6)
7	반도체용 부분품과 부속품(848690)	885,152	27.6	16.0	미국(35.1), 네덜란드(15.5), 독일(6.9)
8	소르비톨, 세정제와 같은 화학물질/화학무기물질(382499)	879,636	46.0	23.0	중국(22.3), 미국(10.9), 독일(7.6)
9	철·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코일상, 열간압연, 두께 3MM 미만) (720839)	698,264	71.5	21.7	중국(19.3), 대만(7.2), 베트남(1.0)
10	편광재료제의 판(900120)	653,303	77.2	22.5	미국(17.0), 중국(4.8), 베트남(0.4)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7> 한국의 대일본 주요 수출 현황

순위	품목	금액(천 불)	한국의 품목별 총수출대비 대일본 수출비중(%)	일본의 품목별 총수입대비 대한국 수입 비중(%)	기타 수출국
1	석유와 역청유(271019)	2,689,694	7.9	57.0	중국(18.7), 대만(14.9), 호주(10.1)
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271012)	2,349,491	22.1	18.1	중국(14.5), 베트남(11.5), 싱가포르(9.2)
3	은(710691)	698,107	59.5	80.2	홍콩(20.8), 태국(7.1), 미국(5.0)
4	메모리(854232)	552,315	0.7	17.0	중국(48.2), 홍콩(33.0), 필리핀(5.4)
5	도금강판(721049)	406,659	14.2	69.1	중국(19.0), 멕시코(14.0), 인도(7.6)
6	철강제의 기타제품(732690)	401,490	23.5	7.0	중국(24.2), 미국(7.7), 대만(7.2)
7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854140)	340,865	7.9	9.0	중국(34.6), 베트남(17.0), 미국(13.9)
8	반도체 부분품과 부속품(848690)	324,410	17.1	19.7	중국(25.6), 미국(19.9), 대만(15.0)
9	프로세서와 컨트롤러(854231)	272,362	1.2	3.1	중국(25.6), 베트남(24.1), 대만(10.7)
1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848071)	257,881	20.8	41.9	중국(11.2), 미국(10.5), 베트남(9.2)

자료: 한국무역협회

III. 경제적 영향

1. 분석 시나리오

□ 일본의 무역규제와 이에 대응한 한국의 보복여부에 따라 다음 2가지로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 1)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민국 수출규제

-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의 대일본 수입 규모는 385,474천 달러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리지스트 93.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84.5%, 에칭가스 41.9%로 상대적으로 높음
- 수입대체 지역으로 미국, 벨기에,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가 있지만 에칭가스를 제외하고는 수입비중이 작아 한국 수입시장에서 일본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생산차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총수출에서 대한민국 수출비중이 에칭가스는 89.3%로 높지만 리지스트는 10.5%,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20.7%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출규제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리지스트는 미국과 대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중국과 대만에 대한 수출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규모보다 크고, 이들 3개 품목이 일본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에 그치고 있음

○ (시나리오 2)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한국의 대일본 수출규제

- 석유제품은 동남아, 중동, 중국 등 수입대체 지역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품목이고, 철강은 자국 내 철강제품으로 대체성이 높아 보복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메모리 반도체, 감광 반도체, 반도체 관련 부속품의 경우 일본의 수입비중은 낮지만 경쟁지역에 비해 품질면에서 한국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보복수단으로 동제품에 대해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일본의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함

<표 8> 일본 수출규제 대상의 수출입 현황

항목	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한국의 對일본 수입규모 (천 달러)	298,891	19,726	66,857
총수입액 대비 對일본 수입 비중(%)	93.2	84.5	41.9
총수입액(천 달러)	320,692	23,336	159,512
한국의 주요 수입국가 (천 달러)	일본(298,891) 미국(18,508) 벨기에(2,639) 중국(573)	일본(19,726) 대만(1,719) 말레이시아(996) 중국(662)	중국(82,974) 일본(66,857) 대만(9,062) 미국(532)

주: 1) 리지스트(HS3707901010), 에칭가스(HS2811111000), 플루오린 폴리이미드(HS3920999010)

2) 2018.12 기준환율 이용하여 달러화 표기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9> 일본 수출규제 대상의 수출입 현황

항목 ¹⁾	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³⁾	에칭가스
한국의 對일본 수입규모 (천 달러) ²⁾	298,891	404,871	67,297
총수출액 대비 對한국 수출 비중(%)	10.5	20.7	89.3
총수출액(천 달러)	2,835,089	1,952,719	75,350
일본의 주요 수출국 (천 달러)	미국(597,038) 대만(532,374) 한국(298,891) 중국(482,934)	중국(767,389) 대만(410,548) 한국(404,871) 홍콩(124,243)	한국(67,297) 대만(3,905) 미국(2,118) 중국(1,401)

주: 1) 리지스트(HS370790000), 에칭가스(HS281111000), 플루오린 폴리이미드(HS392099000)

2) 2018.12 기준환율 이용하여 달러화 표기

3) 일본의 HS 코드 9자리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는 그 외 플라스틱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HS 코드 10자리를 기준으로 추출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표 8>)와 통계상 불일치가 존재함

자료: 일본 재무성

<표 10> 한국의 대일본 주요 수출 현황

순위	품목	금액(천 불)	한국의 품목별 총수출대비 대일본 수출비중(%)	일본의 품목별 총수입대비 대한국 수입 비중(%)
1	석유와 역청유(271019)	2,689,694	7.9	57.0
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271012)	2,349,491	22.1	18.1
3	은(710691)	698,107	59.5	80.2
4	메모리(854232)	552,315	0.7	17.0
5	도금강관(721049)	406,659	14.2	69.1
6	철강제의 기타제품(732690)	401,490	23.5	7.0
7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854140)	340,865	7.9	9.0
8	반도체 부분품과 부속품(848690)	324,410	17.1	19.7
9	프로세서와 컨트롤러(854231)	272,362	1.2	3.1
1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848071)	257,881	20.8	41.9

자료: 한국무역협회

2. 분석결과

□가격을 통한 규제의 경우 수입 중간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비용을 국내의 수요자에게 전가하면서 생산을 이어갈 수 있어 생산중단이라는 심각한 사태는 피할 수 있음

○ 일본이 수출관세를 통해 부품소재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할 경우, 중간 투입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국내소비와 수출 감소로 인한 GDP 감소는 0.15%~0.22%로 추정됨⁶⁾

6) 일본이 수출물량을 규제하더라도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 원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제할 경우의 한국의 GDP 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반도체와 같이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한국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큰 폭으로 국내의 수요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액을 유지할 수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손실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⁷⁾ ○ 일정수준의 수량규제는 가격인상을 통해 비용을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규제와 동일하지만, 이번과 같이 핵심소재를 차단할 경우 공급망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규제보다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유발 -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 기술향상을 통한 중간 투입량 축소 등 공급체인의 재구조화를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장기적인 대책에 속함 <p>□일본의 무역규제에 따른 한국의 GDP 손실은 평균 4.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복을 할 경우 평균 1.2%p에 달하는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대체선과 국내공급을 확대하여 반도체 소재 부족분이 15%일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0.12%에 	<p>달하고, 30%일 경우 2.2%, 45%일 경우 4.24%로 부족분이 증가할수록 GDP 감소폭이 커지다가 부족분이 80%에 달하면 GDP 감소가 8.6%에 달할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일본 수입품이 감소하면 국내 산업이 공급을 확대하는 생산거점 재조정(production reallocation) 효과와 타 지역 수출산업의 진입이 증가하는 수입 대체효과가 발생함 - 이러한 효과를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부족분을 얼마큼 수월하게 메꿀 수 있느냐가 생산차질을 최소화하고 GDP 손실을 줄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p>○ 수출규제로 일본의 GDP 손실은 0.04% 내외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한국 이외의 수입처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수출규제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p>□한국이 보복할 경우, 일본의 GDP가 1.2% 감소하여 보복에 따른 감소효과가 1.2%p에 달할 전망</p>
	<p>7) 한국의 반도체 가격이 증가하더라도 수입국가의 국별 수입품 간 그리고 수입제화와 국내제화 간의 대체탄력성이 낮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0.07%~0.09%에 그침</p>

<표 11>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양국의 GDP 변화

반도체 소재부족분	시나리오 1 일본의 무역 규제(%)		시나리오 2 한국의 보복(%)		보복에 따른 추가 손실(%p)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5%	-0.12	-0.04	-0.89	-2.07	-0.78	-2.03
30%	-2.15	-0.04	-3.09	-1.75	-0.94	-1.72
45%	-4.24	-0.04	-5.37	-1.33	-1.13	-1.30
60%	-6.20	-0.04	-7.53	-0.85	-1.33	-0.81
75%	-8.01	-0.05	-9.56	-0.31	-1.55	-0.26
80%	-8.58	-0.06	-10.20	-0.12	-1.63	-0.07
평균	-4.47	-0.04	-5.64	-1.21	-1.17	-1.16

○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이 줄어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규제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한국 수출기업을 대체하는 일본 기업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수출기업의 독점적 이윤이 감소하면 일본의 내수기업 또는 수출기업의 진입이 증가하고 한국의 수출기업을 대체하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

□보복을 할 경우 한국의 GDP도 일본의 GDP 감소폭만큼 감소하는 죄수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복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이 요구됨

○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를 가지고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수출규제를 이용한다면 양국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중국이 한·일 무역분쟁의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이며, 특히 전기·전자산업에 대한 중국의 시장지배력은 크게 향상될 전망

○ 미국의 GDP 증가는 0.03%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하여 한·일 무역분쟁의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

-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타 지역의 GDP는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한국과 일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의 GDP는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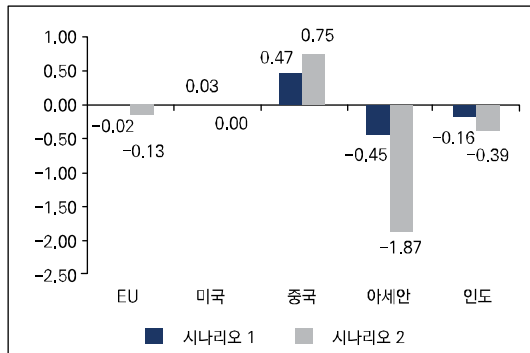
○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전기·전자산업의 경우 한국의 생산이 20.6% 감소하고 일본의 생산이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생산이 2.1% 증가하면서 동산업의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음

○ 한·일 양국의 협력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할 국가로 발전하는데 있어 한·일 무역분쟁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자유 시장경제 블록'과 '국가 자본주의 체제'의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일 무역 갈등은 한·일양국은 물론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

<그림 1>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주요 지역의 GDP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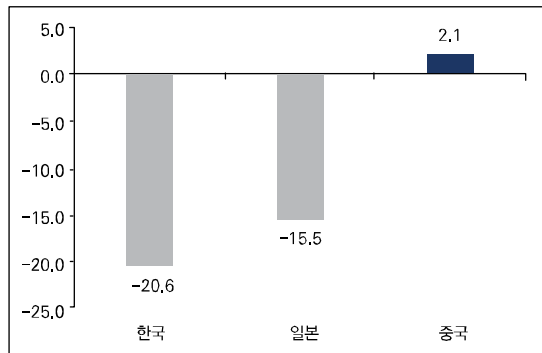
(단위: %)



주: 반도체 소재부품 30%~45%인 구간의 평균값

<그림 2> 전기·전자산업의 생산량 변화

(단위: %)



3. 한·일 무역분쟁 확대

1) 일본의 규제수단

□ 일본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주력업종과 대표기업들의 급소를 파악하고 수출규제 품목을 정교하게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추가 제재를 예시하고 있음

- ① 핵심 산업의 산업용 원료와 기술 반출 제한 → 화이트 리스트 제외 → 인적교류 제한
- ② 무비자 입국 및 취업생 입국 제한
- ③ 수입관세 인상
- ④ CPTPP 한국 참여 거부
- ⑤ 금융제재⁸⁾ - 한·일 은행 간 크레딧 라인(신용공여) 차단, 일본 보유 한국 기업 주식의결권 행사, 일본이 계획했던 한국 투자계획 철회
- ⑥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차압
- ⑦ 국교 단절

○ 일본 내 한국 기업자산 차압과 국교 단절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지만 금융규제는 물밑으로 진행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음

2) 금융규제

□ 외환위기 때의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유출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종결된 통화스와프와 같이 이번에도 한·일 갈등이 금융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일본계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국내은행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외환위기가 시작되었음⁹⁾

○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2008년 300억 달러, 2011년 700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만기연장이 불발로 끝나고 현재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없는 상황임¹⁰⁾

□ 대외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대일본 금융의 존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한·일 갈등이 금융규제로 확대되더라도 외환위기 때와 같이 급속하게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286%에 달했던 외환위기 때와 달리 현재는 31%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단기외채의 비중도 2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환위기 당시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대외건전성이 취약했으나 2015년에 천억 달러가 넘는 정도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져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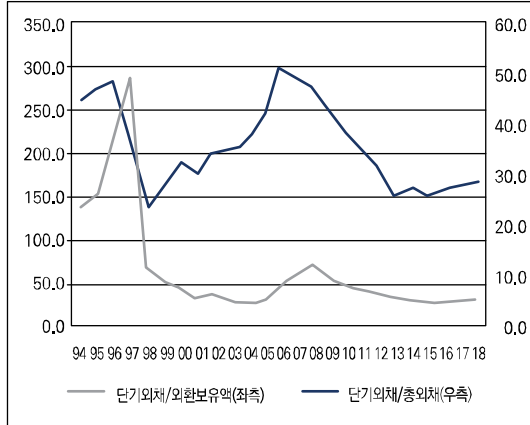
8) [동서남북] 김태근 “현실을 알고 큰 소리쳤으면..”, 조선일보 2019.7.16

9)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의 버트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발언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라는 주장과 일본 대형 보험사의 도산으로 일본 상업은행이 BIS 비율 8%를 맞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있음

10)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2012년 만기도래 570억 달러 연장이 거부되었으며 잔여액도 소녀상 문제 등의 문제로 2015년 종료되었음

<그림 3> 단기외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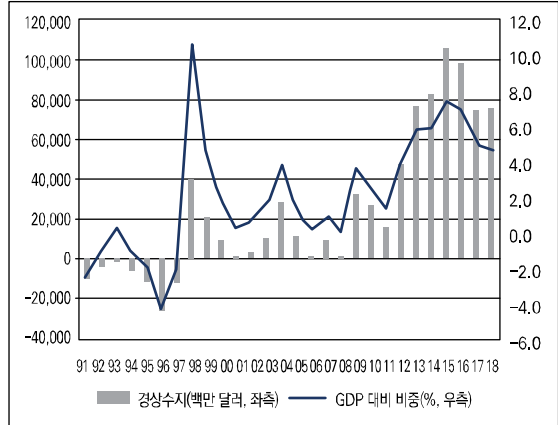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그림 4>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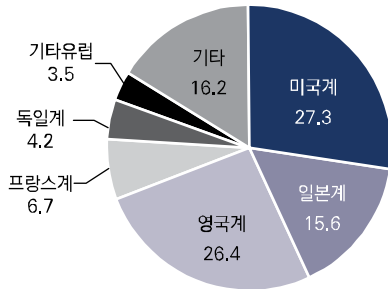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은행

<그림 5> 글로벌 은행의 對한국 자산의 국적별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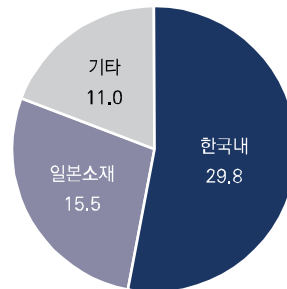


주: 2018년 말 기준

자료: BIS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KIEP(2019) "일본 금융 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과급영향 점검"에서 재인용

<그림 6> 일본계 은행 對한국 자산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주: 2018년 말 기준

자료: BIS Consolidated Banking Statistics, KIEP(2019) "일본 금융 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과급영향 점검"에서 재인용

<p>□KIEP(2019)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대한국 총여신규모는 563억 달러로 글로벌 은행의 대한국 총여신규모 2,894억 달러의 약 15.6%를 차지하고 있음¹¹⁾</p> <p>○ <그림 6>에서 보듯이 한국 내 일본계 은행의 여신은 298억 달러에 달하며, 일본 소재 은행의 대한국 여신은 155억 달러, 기타 여신은 110억 달러로 추정¹²⁾</p> <p>○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이 73.4%, 공공부문 15.0%, 은행부문 11.7%를 차지하고 있음</p>	<p>□<표 12>에서 보듯이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대외금융부채는 833억 달러(92.9조 원)에 달해 2018년 말 한국증시 총액(1,572조 원)에서 5.9%를 차지하고 있음¹³⁾</p> <p>○ 단기간에 자금유출 가능성이 낮은 직접투자 496억 달러를 제외하면 일본에 대한 금융부채가 한국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함</p>
	<p>11) 은행 자산은 대출, 채권, 주식, 파생금융상품, 대손충당금을 포함 12) 기타 자산은 우리나라 기업이 제3국에서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제3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차감) 등의 조정분을 포함 13) 2018년 12월 말 기준환율 1115.7원/달러 적용</p>

<표 12> 지역별 대외금융 자산¹⁾ 및 부채

(단위: 억 달러, %)

	금융자산		금융부채	
	총액	일본	총액	일본
2018년 말 (A)	11,168 (100.0)	389 (3.5)	11,075 (100.0)	833 (7.5)
직접투자	3,876 (100.0)	77 (2.0)	2,314 (100.0)	496 (21.4)
증권투자	4,557 (100.0)	214 (4.7)	6,682 (100.0)	206 (3.1)
파생금융상품	200 (100.0)	9 (4.5)	277 (100.0)	14 (5.0)
기타 투자 ²⁾	2,535 (100.0)	89 (3.5)	1,802 (100.0)	118 (6.5)
2017년 말 (B)	10,724 (100.0)	371 (3.5)	11,999 (100.0)	860 (7.2)
증감(A - B)	444	19	-924	-27

주: 1) 준비자산 제외, 2) 현금 및 예금, 차입금, 무역신용 등, 3) () 내는 지역별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2019), 2018년 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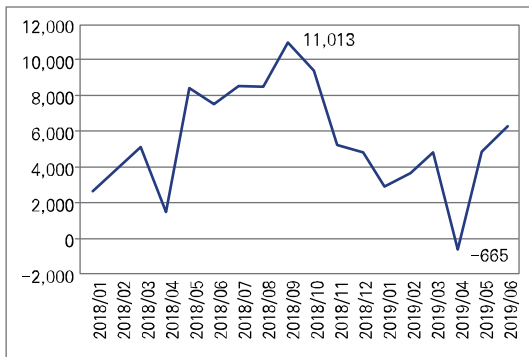
□ 그러나 최근의 경기상황과 금융흐름의 동조화 현상을 고려하면 일본의 금융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총체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올 1분기 우리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141.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9%나 증가하여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31.7억 달러로 35.7%나 감소하였음
-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연속 8개월째 감소하고 올 4월의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1분기 경제성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4%를 기록하였음

- S&P와 무디스가 국가신용도와 기업신용도 하락을 꾸준히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금융규제는 신용도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신용도가 하락하면 환율이 급등하고 자본이 빠르게 빠져 나가면서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임
- 2018년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37억 달러에 달하지만 BIS 기준(3개월 치 수입액 + 유동성 외채 +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금의 1/3) 적정보유액 고 약 4,700억 원에 비해 700억 원 부족한 상황임
 - 현재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과 맺은 통화스와프 1,270억 달러를 합치면 적정보유액을 초과하지만 단기에 가용할 수 있는 현금성 외환보유액은 3.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안전한 수준이라 할 수 없음

<그림 7>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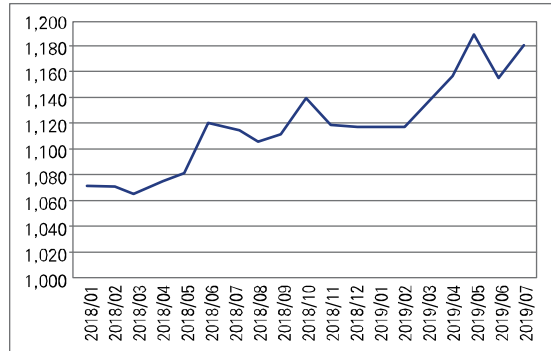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은행

<그림 8> 환율(말일 기준)

(단위: 원/달러)



자료: 한국은행

IV. 정책 제언

□ 한·일 양국의 협력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할 국가로 발전하는데 있어 한·일 무역분쟁은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수출규제가 자동차, 철강 등으로 확대되거나, 금융 규제 및 비관세 장벽까지 동원된다면 양국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함
- 우리와 같이 기축 통화국이 아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에서 경제적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국가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개별기업 및 경제단체의 민간 외교력까지 총동원하여 한일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함

- 미·중 무역분쟁이 「자유시장경제 블록」 과 「국가자본주의 체제」 의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일 무역 갈등은 한·일 양국은 물론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높음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경제 국가들이 연합해서 국가주도로 기술을 탈취하고 시장왜곡을 서슴지 않는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개별기업과 경제단체의 민간외교력까지 총동원하여 한·일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함

- 과거에는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불거져도 민간차원의 협력이 양국 간 갈등의 완충지대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제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음
- 대법원 판결 직후 일본의 3대 경제단체(계이다렌,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와 한·일경제협회는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 경제인 회의와 양국 상공회의를 연기하는 강경입장을 보여 왔음
- 이런 때는 과거사 문제로 일본기업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임

참고문헌

조경엽(2018), “미·중 무역전쟁과 죄수의 딜레마”,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9, No. 18, 2019.

한국은행(2019), “2018년 말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Dixit, A.K., and J.E. Stiglitz,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optimum product divers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7(3), 1977.

Krugman, P., “Scale Economies, Production Differentiation, and the Pattern of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70(5), 1980.

Melitz, M.J.,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Econometrica*, Vol. 71, No. 6, 2003.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9년 09월 06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